

‘광주형 일자리’ 협상 15일 데드라인

현대차·노동계 설득 총력...광주시, 국회 예산 심의까지 재협상 마무리

광주시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15일까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대차와 노동계를 다시 만나 양측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정진행 시장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역 노동계와 관련한 투자협약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대차와의 협상은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해왔으며, 이 시장이 직접 나서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권 협조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15일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시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전날에는 지역 노동계를 잇달아 만나 사업 참여를 호소했다.

9일 오전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을 예정 없이 만나러 갔고, 오후에는 협상 파트너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과 만나 평균조임 등 협상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자동차 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비춰 현실성이 없다며 사업 중단을 요

구하고 있다.

시와 노동계의 협상 테이블인 투자유치 추진단 회의도 이 시장의 방문에 이어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병훈 부시장은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을 밝히고 투자협약서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역 노동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지난 8일 서울 현대차 본사를 찾아 노동계와 논의된 협약서를 토대로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금 수준, 공장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 2~3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이견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을 노동계에 설명하고 동의

를 끌어낼 계획이다.

노동계와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시 현대차를 찾아 재협상에 나선다.

국회 예산 심의가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려면 이날까지는 현대차와의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시는 현대차의 투자 협상을 끌어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국회 예산 심의까지 협상을 끝내달라고 뜻을 밝은 만큼 이번 재협상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사업에 반대하면서 현대차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데다, 노동계도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여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현대차와 노동계, 노동계 내부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재협상도 실패하게 된다면 사업 추진의 동력도 급격하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 확보’라는 명분이 사라지면 시장 당정을 비롯해 현대차와 노동계를 사업에 끌어들이는 명분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와 노동계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아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15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마지막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지방분권 토론회 전라남도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지난 9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어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견인할 도 차원의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제공

한전, 부지선정 로드맵 조만간 발표

‘한전 결정에 따른다’는 광주-전남 지자체의 합의로 준비 작업에 착수한 한국전력이 조만간 한전공대 부지선정 로드맵을 발표할 전망이다.

11일 한전공대설립단에 따르면 한전은 용역사인 ‘A.T.Kearney’가 부지선정 절차와 방법을 확정해 제안하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전 측은 로드맵 발표의 구체적 시기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용역 최종보고회와 함께 부지선정 절차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로드맵 발표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용역 과정에서 부지선정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남권 신공항, 제주 신공항 등 추진 과정에서 용역절차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진 것을 의식한 것이다.

용역사는 자체 인력풀로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안과 함께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공동 성명을 내고 “한전공대 부지는 일체의 정치적·지역적 고려 없이 최선의 부지를 한전에 선정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용역 내 전문가위원회’의 입지선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목표

지역에서 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지역 간 유치경쟁은 여전하다.

한전은 지역 간 유치경쟁을 고려해 부지선정을 용역 내 전문가위원회에 일임하고, 구체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전공대설립단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대외적인 반대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늦어도 내년 초까지 부지선정 절차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없다”며 “부지선정에 용역사의 스케줄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여수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검·경 수사 이어 감사원 전방위 조사...실체 드러날지 주목

검찰과 경찰 수사에도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시작된 감사원 감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해부터 경찰과 검찰이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택지 개발사업도 제자리걸음이어서 의혹 해소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 개발업체 대표로 일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하는 등 의혹이 연루됐지만, 개발사업의 실체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여수시를 포함한 전국 58개 지자체에 대해 벌이고 있는 특별감사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년간 버려진 황무지를 개발한 행정의 결과인지,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인지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드러날 전망이다.

◇ 20년간 방치된 땅이 택지로...개발업자 막대한 이익 챙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포지구는 삼부토권이 1986년 12만5천400㎡를 매입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만들어야 했지만, 준공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분양하지 못해 20여년간 사업은 중단됐다.

2015년 개발업체 Y사가 용지를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자 인허가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다.

특히 Y사 대표 김모(48)씨가 주전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현재 일반투자자들은 여수시가 토지분할을 해주지 않으면서 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 감·경 특혜 의혹 밝혀지지 못해...횡령 혐의 개발업자는 풀려나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지난해 3월 Y사 대표 김씨가 매각 대금을 횡령했

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처음 제기됐다.

경찰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와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한편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여수시에 위임한 전남도를 상대로 특혜 여부를 조사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경찰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토지개발업체 Y사 대표 김씨와 이사 박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잡혀왔으며 7개월만인 올해 4월 검거돼 구속됐다.

김씨는 김씨에 대해 법인 자금 28억 6천여만원 등 96여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횡령 금액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달 24일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를 석방했다.

의혹의 핵심에 있던 김씨가 석방되면서 특혜 의혹에 대한 실제 규명은 감사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 주 전 시장·공무원 직무유기는 무혐의...감사에서 의혹 밝혀질까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은 지난 4월 주 전 시장이 조카사위인 개발업체 대표 김씨에게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철은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공무원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철이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당시 인허가 과정에 대해 조사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18일부터 감사가 들어가 6일까지 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져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오승택 기자 ost6002@

광양시 공고 제2018-211호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 제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도안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12.

광 양 시

- 공고기간 : 2018. 11. 08. ~ 2018. 11. 21. (14일간)
-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광양시청 산림소득과(제2층사)
- 관계도시 : 개재생략
- 의견제출 :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에는 순천국유림관리소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경우에는 광양시 산림소득과로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정도면 등
-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같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산림소득과 산림보호팀(☎ 061-797-3423),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지원조성팀(☎ 061-740-9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가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강진, 고흥, 함평, 해남

전화문의 : 062)227-0000 / 010-9556-0000 (직통)

팩 스 : 062)227-0084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사무실 임대

- 지하철 농성역 4번출구 옆
- 화정동 776-12 3층 60평
- 광주버스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CGV영화관 인접
- 광주 새우리병원 건너편
- 2층 복교당 한약방 운영중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